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3개월 활동 보고>

- 총 85일 활동 기간 노상원 수사2단, 정보사 HID, 사이버내란, 경호처 압색 방해 밝혀
- 빠른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빠른 탄핵 인용 결정과 특검 촉구

- 지난 24.12.3 한밤중에 윤석열 내란 일당은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과 선관위를 비롯해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을 체포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언론과 국민을 옥죄는 등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민들과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이를 막아냈고 12.4 새벽에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하였다.
-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방, 행안,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추미애)을 구성하였고,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내란 관련
자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 내란진상조사단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약 85일 간 활동하면서 총 11차 회의와
19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과 관련한 주요 내란 혐의를 밝혔다. 주요 성과로
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 사조직인 수단 2단의 실체를 밝혀냈고 △정보
사 HID요원들의 내란 개입 △군 사이버사의 사이버정찰 TF 활동 △수사기관의
경호처 압수수색 방해 활동 등이다.
- 노상원은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들어 주요 정치인, 선관위 직원들을 처단하려는
반인도적인 잔인무도한 계획까지 세웠음을 확인했다. 아시다시피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은 정보사령관 출신으로 근무연이 있었던 김용현과 접촉하며 내란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주요 인사의 신병 처리 방안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방안 △국회 봉쇄, '출금'(출국금지) 등 비상계엄 날짜별 계획 △계엄 후 목표 등 그 방법 또한 반인도적, 잔인무도, 북의 소행으로 덮어씌우는 것이었다.

- 이런 잔인무도한 민간인을 수사 2단의 실질적 단장으로 움직이게 하고, 형식상의 단장, 부단장만 임명하려 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노상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계엄과 관련한 핀셋 수사로 공소장 또한 내란중요 종사자 혐의만 기소됐을 뿐 나머지 잔인무도한 살인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 또한, 진상조사단은 정보사 HID요원들의 내란 개입을 최초로 밝혔다. 노상원과 문상호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는 속초 돼지부대 소속 북과공작원들을 9월부터 최정예 특수임무요원으로 구성해서, 판교 100여단에 본부를 두고, 선관위 침탈과 함께 신길동 비밀 심문시설에서 선관위 직원 등을 심문하려고 하였다.
- 내란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의 공세적 사이버활동 지침에 따라 군 사이버정찰 TF를 활용해 국내 인지전까지 펼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이버 내란 정황을 밝혀냈다. TF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사이버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이밖에도 수사기관의 경호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경호처의 불법적 저항 과정, 계엄 해제이후 육본 주요 지휘부 출동과정, HID 블랙요원들 북풍공작, 수방사 수호신 TF, 드론사 북 침투 무인기 공작 지시 등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계엄을 일으킨 내란 혐의에 대해 밝혀냈다.

- 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수사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수사에 그쳤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거다’ 등 검찰과 관련한 수사는 미흡하고, 최상목 대행의 역할,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의 임무, 군조직의 노상원과 관련한 수사, 2차3차 계엄 시도 등 아직 많은 부분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 윤석열 내란과 관련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역사로 기록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빠른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특검을 즉시 수용해 남아 있는 진실들을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내길 기대한다. 끝

※ 문의 : 추미애 의원실 784-1626

2025.2.26.(수)

더불어
민주당